

인류멸망 머지않아... 기후대책 '발등의 불'

정책브리핑

산업부

韓·中 FTA 후속협상 나서

기후변화 대책 어떻게 가야하나

“환경위기 대하는 태도전환 절실 정부·산업계 등 각 계층 노력해야”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에서 유세프 나세프 UNFCCC 적응프로그램 국장(앞줄 왼쪽 첫번째), 유엔철 외교부 환경변화대사(두번째), 한정에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세번째)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네번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다섯번째) 등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오진희 기자

폭염, 홍수, 가뭄, 지구온난화...
얼음 위에서 갈길을 잃은 북극의 동물들이 절멸될 상황에 놓여있는 모습을 매일같이 우리는 접한다. 하지만 TV에서 30초 동안 나오는 뉴스에 잠시 눈이 스칠 뿐 그뿐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200~300년 내에 멸망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대표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런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않을만 하다"며, 지구환경의 위기를 대하는 태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한다. 이 위기 상황에 환경문제는 더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정부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개인, 기업, 시민사회 등으로까지 뻗어나가야 한다는 게 현재 당면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지난 2015년 12월 파리 유엔기후협약 총회(COP21)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반으로 해 기후변화 영향과 평가, 재정지원 근거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08년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올해는 10년을 맞았다. 그동안 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마련해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외부 전문가평가단을 마련했고, 기초자치단체까지 2차적응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0회 '기후변화적응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정부차원의 2차 국가적응전략을 마무리하고, 3차 전략을 계획 중인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상황을 함께 논의하고,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각국의 현황과 대응 전략들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축사로 나선 한정에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정부, 산업계, 개인 등 각 계층이 함께 CO2 감축 등 노력을 해줘야 가능하다.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되도록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을 맡았다. 최 교수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나 정부가 알려주기 전부터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추세라면 인류 멸망이 더 빠르게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는 글로벌하다. 국경을 초월한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문제는 펠레아 펠수 없다"며 "우리는 '호모사피엔스(현명한 인간)'라기 보다 '호모심비우스(공생하는 인간)'라고 명명해야 한다. 공생인으로 환경을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유세프 나세프 UNFCCC 적응프로그램 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3차 국가적응전략을 세울 때 도움이 될만한 지점 몇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우선 "AI, 머신러닝, 딥러닝 등 지식처리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며 "날씨, 기후예측과 리스크를 정량화하면서 생태계를 관리하고 미래적용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기술적인 패러다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적응 계획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될 수 있는 경제적불평등 지양 ▲지속가능개발의 전체 틀 안의 기후적응계획 수립 ▲지속적인 대화와 매커니즘 개발 등을 조언했다.

이날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의 기후변화적응 대책 및 정책에 관한 논의들도 이뤄졌다. 신영수 환경부 사무관은 "국가 거버넌스 구성 중 하나가 지역참여형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 시민사회, 지역전문가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oul.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김정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이, 중국은 양정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대표로 참석하며 양국 정부부처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차 협상시 합의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사전 제출한 서비스·투자 협정문안을 기반으로 협정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지난 협상에 이어 분과별로 각국 법·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질의응답 역시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현재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서비스 시장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경제 및 통상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가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홈페이지나 가짜 공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주의 보가 내려졌다.

금감감독원은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고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고 성명(XXX)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개요와 함께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불법도박자금을 세탁하겠다고 한 뒤 다른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 가로챘다. /안상미 기자 smahn1@

대구·시흥시에 880억 투입 '스마트시티' 만든다

국토부-과기정통부

대구,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형 시흥, 복지 등 비즈니스 창출형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10일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로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를 선정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다.

연구목적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문제 해결형, 시흥시는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된다.

도시문제 해결형은 교통·안전·도시행정 등 공통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 모델이다.

대구시는 '산업성장 및 시민행복이 함께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연구 목표로 제시했다. 연구 수행 계획으로는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교통), 사고범죄 긴급구난 대응(안전), 재난 조기경보 대응(도시행정) 등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즈니스 창출형은 에너지, 환경, 복지 등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 규모의 도시에서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추진하는 연구 모

델이다. 시흥시는 지역산업의 쇠퇴, 고령인구 증가, 도시과밀 등 중소도시의 보편적 특성이 있어 실증연구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도시문제 해결형에는 국비 358억원을 포함한 511억원, 비즈니스 창출형은 국비 263억원 등 368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 8월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된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미세먼지, 가상증강현실 등 9대 연구개발 사업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 연

구과제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구비 1159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이번 실증도시 선정에 따라 사업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기업을 공모해 8월부터 연구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증도시를 통해 개발되는 연구성과는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도시에 순차적으로 확산 보급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용 기자 csh9101@

백운규, 완성차 3사 1박2일 릴레이 방문

美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방안 모색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본격 대응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백 장관은 10일 르노삼성 부산공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다음 날인 11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한국GM 부평 디자인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업체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국내 완성차 3사를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공청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백 장관은 자동차 업계의 수출상황을 점검 및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적인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업계의 릴레이 현장 방문을 계기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중견 부품 협력업체와의 현장 소통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이노프럼 2018' 한국관 찾은 김동연

9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러시아 국제산업기술 박람회 '이노프럼 2018'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한국기업 전시관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2024년까지 내진 보강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설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까지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은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648개소)에서 30만톤 이상(1256개소)으로 약 2배 정도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에 대한 내진 실태 점검을 통해 1019개소(74.6%)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266개소는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됐다. /세종=최신용 기자